투데이 칼럼

옥정호 수면개발, 도민이 우선인가 도지사가 우선인가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정읍시민에게 옥정호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아름다운 산이 호수 주위를 병풍처럼 드리우고 산길 따라 굽이굽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호수 경관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청명한 하늘아래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옥정호 수면을 본다면 누구나 감탄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힐링을 하면서 여유와 행복을 느낀다.

그뿐인가, 옥정호는 12만 정읍시민이 먹을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고마운 호수,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수 없는 소중한 물자원으로써 가치가 매우 크다.

이렇듯 정읍시민에게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어머니의 젖줄 같은 옥정호가 난데없이 도마에 오르고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은 2015년 8월 7일 옥정호의 70%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임실군에서 대규모 수상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임실군에서는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수상스키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였다.

이에 옥정호를 식수원로 사용하는 정읍시에서는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작년 11월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서 "선수변, 후수면"개발방식에 양시군이 합의함으로써 일단 진정이 되긴 하였지만, 최근 전라북도에서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연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선수변, 후수면"개발은 옥정호 수변개발을 위한 관련 현안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하되, 수면이용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뒤 환경영향 평가 후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지만, 그동안 연구용역 대부분 발주기관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시민단체 위주로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우리 정읍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확보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임실군에서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를 단순한 개발의 대상으로 삼아 더 많은 이익을 더 창출하려는 자세와 전라북도의 숨은 의지가 결합된 단기적 사고의 결정판이 아닐수 없다.

지금도 정읍시 관할 옥정호 주변은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풍경이지만, 임실군 관할 주변은 수많은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있고 이미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져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관광지로써 명성이 높으며, 현재 상태로도 난개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2017년 섬진강댐 주변 지원사업비 17억원중 62%에 달하는 11억원을 임실군에, 정읍시는 4억원, 순창군은 1.5억원, 완주군에는 1.2억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옥정호는 섬진강댐 조성으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계화도 간척지 등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몰민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가슴 아픈 역사를 품은 곳이다. 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2만여명의 수몰민들의 아픔을 댓가로 탄생한 옥정호는 지난 50여년 동안 수십만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쓰이면서 수몰민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을 해온 호수이다.

이렇듯 일반 관광자원과 다르게 옥정호가 먹는 물이라는 특징을 무시한채 12만 정읍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임실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묻고 싶다.

또한, 입장을 바꾸어 임실군민이 먹는 식수원 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배를 타고 수상스키를 즐긴다면 임실군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개발은 곧 오염이다. 제아무리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한들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임실군에서는 엄청난 개발비용과 유지비용이 수반되는 개발 이익보다는 자연과 사람이 우선인 보존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는만큼 임실군은 지금이라도 옥정호 수면개발로 정읍시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더 이상 정읍시와 임실군민의 갈등을 부채질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 설

도내 기업 생존률이 궁금하다

도내 기업 생존률이 어떤지 궁금하다. 최근에 전주 하이트 공장 매각설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지금이다. 가뜩이나 전북 경제가 어려운데 도내 큰 기업들 쪽에서 힘들다는 호소를 흘릴 때마다 도민들은 불안한 정서를 떨칠 수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위태로운 까닭이다. 도내 기업률 생존률이 지난해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알고 싶다. 올 여름 군산 조선소의 폐쇄 수순 밟기와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을 생각할 때 그 대답이 뻔해도 그것은 그렇다.

전북도에게 다시 묻거니와 도내 기업 생존률이 궁금하다.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나아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짐작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힘을 실어서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바람에서 말이다. 전북도는 지역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소기업들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중소기업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평균잡아 도내 기업들 10개 중 7개가 5년내에 문을 닫고 있다니 난감하다.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인들은 체감경기를 안 좋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문제이다.

전북도더러 중소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한몫을 계속해서 담당해줘야 하는 까닭이다.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동안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애써 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도내 기업의 생존률이 저조한 것에 생각이 많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까 고민하라는 것이다. 예전처럼 행정적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북도는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고무시킬 방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전북형 일자리 만들기 잘하고 있는가

전북형 일자리 창출에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번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다. 도지사와 각 실국장과 일자리 정책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말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던 게 그것이다. 지역 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세운 것이며 17개 과제 대상을 이야기한 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책'과 '청년내일일자리채움공제' 를 도입하려 했던 거 말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려선 안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전북도는 전임 정부 때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을 각성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지만 젊은이들로부터 볼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북도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반비례하여 괜찮은 일자리가 적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형 일자리 찾기는 글자그대로 피터지는 경쟁이 아닐 수 없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침에 따라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 쪽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져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했다가는 거주 인구가 많은 다른 광역시도들의 등살에 밀려 일자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도민들이 전북도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부터 미리 전북형 일자리 창출을 힘차게 시도했으면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다. 본보는 도내 근로자의 40%가 넘게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도는 더 분발해야 한다. 취직 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겠다는 지적이다. 그들 상당수는 이 지역을 떠나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의 성공 신화를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

독자제언

보복운전 '욱' 했다 전과자 될 수도

최근 각종 언론매체나 SNS등을 보면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을 뒤로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을 침범해 차를 막고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행위도 종종 볼 수 있다.

경찰의 수사·단속 결과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은 하루 평균 83.6건이 발생했다. 또 이로 인해 형사 입건된 경우는 하루 17명 꼴이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진로변경이 전체 502명 중 16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적·상향등(114명·22.7%), 끼어들기(90명·18%), 서행운전(82명·16.4%) 등이 꼽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유형 9개가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 발생 등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이 중 두 가지 이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이어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다.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 된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도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시급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외국 통신사의 말처럼 최근 성폭력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일 정도로 발생이 급증하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주로 여름철 피서지에서 많이 일어났던 '불법촬영'범죄는 지하철과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연인관계 때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리벤지 포르노'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지인능욕'범죄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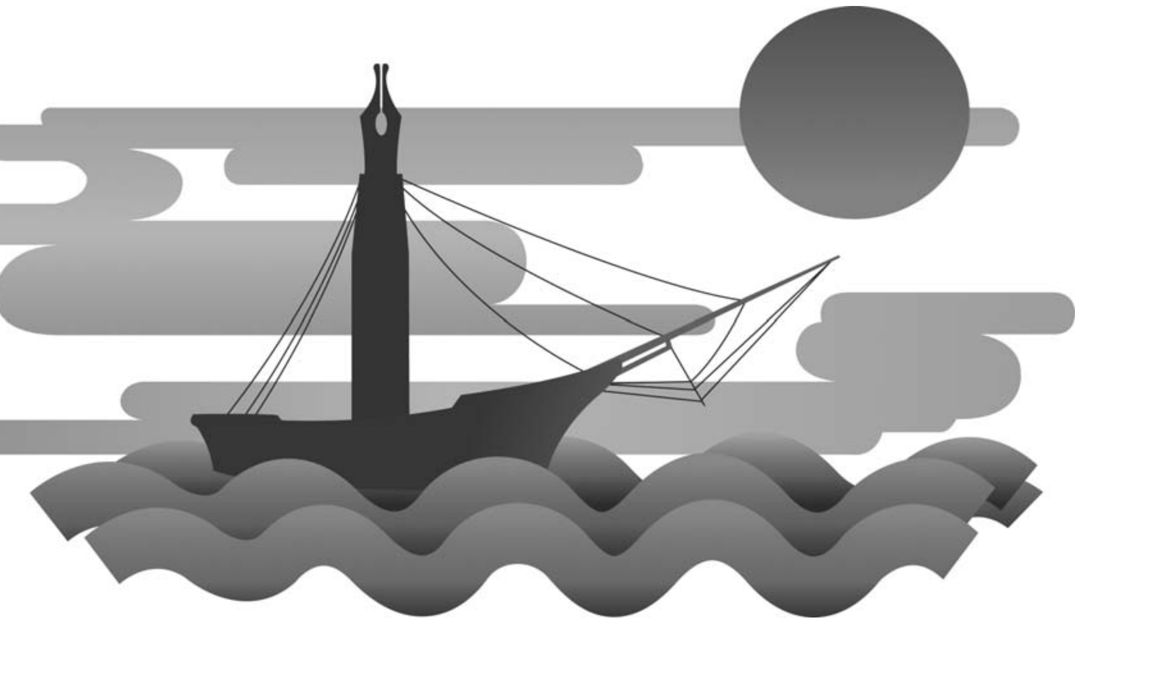
'지인능욕' 은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하여 SNS 등을 통해 유포하고 판매하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 돈을 받고 합성사진을 만들어주는 시장까지 형성될 정도이다.

특히 지인을 대상 범죄이다 보니 SNS에 피해자의 얼굴은 물론 신상까지도 공개가 돼 낯선 사람들의 음란전화나 욕설 가득한 연락을 받는 등 2차 피해까지도 심각한 수준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본인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 피해사실을 알더라도 신속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는 오랜 기간 범죄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한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이었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